

신도시와 자연보전권

「배산임수」. 옛부터 선조들이 살기 좋은 집터로 꼽았던 곳이다. 앞에는 한강물이 흐르고 뒷편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땅.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거리에 있는 경기도 청평, 양평, 가평, 용인, 이천, 여주 등이 이런 곳들이다.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기간동안 신도시 2~3군데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곳들이 그 후보지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72년부터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고 따라서 개발의 여지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에서 더 이상 집지를 싼 땅을 구하기 어려운 개발론자들에게 몇가지 걸림돌만 없다면 입맛에 딱맞는 곳이다. 공해없는 청정도시로 신도시가 꾸며진다면 상수원보호와 맑은물관리라는 큰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정부내 개발론자들의 시각일런지도 모른다.

신도시 몇군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밝혀지면서 「자연보전권역내」 몇곳이 후보지로 도마위에 올라 있다. 서울에서 한시간남짓거리라는 수수께끼 풀이같은 입지조건에 따라 경기도 청평, 양평, 용인, 이천, 여주 등이 곧바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부



柳根奭

(내외경제 사회부기자)

가 신도시건설계획을 공식화 하기 앞서 자연보전권역을 개발이 완화되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6월초 내놓았을 때 신도시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안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발상에 이 지역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처의 입장은 한마디로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팔당상수원보호와 자연생태계유지를 위해선 기존 자연보전권역을 털끝하나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34km²지역.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경기도 가평, 용인, 양평, 이천, 여주 등 7개군 43개읍면이 지난 90년 7월 부터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신도

시 추가건설후보지가 모두 특별대책지역안에 들어있는 셈이다. 환경처는 이곳에 인구 5~10만이 살아가는 신도시건설계획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만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지금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 및 하루 5백m³이상 폐수배출공장 4백m²이상의 숙박초미판매시설 8백m²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이 입지제한을 받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상 신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다.

신도시를 이 지역에 짓는다면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건설부 등 개발부처가 수도권정비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환경처는 이 지역이 보전돼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1천5백만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오염가능성을 꼽고 있다. 아무리 처리가 잘돼더라도 5~10만인구가 쏟아내는 생활하수가 팔당호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팔당호는 현재 하루 3백90만톤의 용수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용수공급이 하루 7백60만톤으로 늘게 되고 우리나라인구의 절반이상 이 물을 마시며 살

아 가야한다.

또 자연보전권내의 생태계 파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들고 있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된 산림이 보존돼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8등급이상의 녹지 76%가 이곳에 분포해 있다. 개발이 이루어질때 역으로 심각한 생태계파괴가 불가피하고 수도권 1천5백만주민은 녹지공간을 영원히 잃어 버리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건설은 주택난해소만을 목적으로 마구잡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환경을 우선 생각한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때다. 평촌, 중동 등과 같은 신도시는 공단부근에 건설돼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후에도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환경처는 신설되는 수도권신도시는 한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도시건설이 당장의 주택건설실적만을 위해 성급히 결정되고 입지도 충분한 검토없이 선정됨으로써 빚어지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않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연보전권역안에 신도시를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지 않다. 또 추진되고 있는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도권정비 계획과 함께 신도시추가건설안을 맞물려 추진하는 것에 비춰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곧바로 공장들이 밀려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팔당호주변지역이 도



**자연보전권역안에
신도시를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지
않다. 또 추진되고
있는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도권정비 계획과 함께
신도시추가건설안을
맞물려 추진하는 것에
비춰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곧바로 공장들이
밀려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팔당호주변지역이
도마위에서 숨죽이고 있는
셈이다.**

마위에서 숨죽이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부처간 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내 어느부처도 보전을 주장하는 곳은 없다며』 신경제 흐름속에서 차치하면 씻을 수 없는 환경파괴를 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람은 물없는 살수 없는 존재다. 맑은 물관리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게 일반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좁은 땅을 적절히 개발하고 이용해야한다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이 만만치않다. 신경제 바람속에서 더욱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보전의 논리가 점점 설 땅을 잃고 있다. 어느날 아침 「앞에는 맑은 한강물이 흐르는 전원속의 쾌적한 아파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조건신문광고를 보게될런지도 모른다. 그때가 오면 수도권시민들은 매일 식탁에서 수입생수와 마주하게 될 듯 싶다. ◀